한 대학의 총장께서 국가 전체 과학기술 비전과 정책을 놓고 고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이렇게 모두가 고민하다 보면 뭔가 답을 찾기도 쉬울 것이다. 다만 제안하신 5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정책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핵심을 분명히 하고 장벽이 과연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우선 융합 부분이다. 융합의 방향은 다 안다. 그런데 융합이 안되는 이유는 융합혁신이 일어나면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저항 때문이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융합에 반대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융합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여기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예컨대 스마트그리드는 한전이 그렇고, 무인자동차는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다. 스마트 농업은 농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저항하고, 보건헬스과 ICT융합은 보건의료업계가 반대한다. 하나같이 규제로 보호받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다. 그런 점에서 융합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와 규제의 문제다. 누가 이를 깨뜨려야 하는가. 바로 정부다. 이걸 깨야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해진다. 경쟁이 자유로운 시장경제야말로 융합의 최적 테스트베드다.

두번째 산과 학.연간 협업, 대-중기간 협업, 민과 군간 협업을 말하셨는데 이것도 논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솔직히 산이 무슨 문제이겠나. 산.학이든 산.연이든 문제는 대학이요, 연구소다. 그만한 수준이 안되니 우수한 기업들이 외면하는 것아닌가. 대.중기도 그렇다. 이건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중기의 문제다. 기술에 눈을 떤 중기가 이 땅에 과연 얼마나 되나. 연구개발하지 않아도 정부 보조금으로 충분히 먹고사는 중기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중기들일수록 구조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묶인 인적, 물적자원도 시장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된다. 그만큼 새로운 창업도 어렵고, 해봐야 사장진입 단계부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기가 진짜 똑똑하면 대-중기는 정부가 말을 안해도 스스로 시장에서 협업하게 되어 있다. 민.군 협업도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폐쇄적 군이 문제다. 미국처럼 군이 고유한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군에서 민으로 흘러 갈 기술이 과연 얼마나 있겠나. 차라리 우리는 민에서 군으로 기술이 흘러가는 게 맞다. 민이 훨씬 앞서있지 않은가. 그러자면 군이 달라져야 한다. 민의 기술을 개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한다. 군 연구개발체제를 싹 뜯어 고쳐야 한다.

세번째 기초연구 비중을 높이자는 것은 좋다. 그러나 얼마나 높이면 성에 차겠나. 어느 정도가 최적인가. 과학계에서 이 문제를 단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논의한 적 있나. 우리나라 과학계는 이런 논쟁이 없다.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논쟁조차 말이다. 게다가 기초연구 비중을 높인다고 치자. 어떻게 배분하는게 바람직한가. IBS처럼 집중방식 지원이 맞나, 아니면 뿌려주는 게 맞나. 그것도 아니라면 둘을 적당히 섞는 게 맞나. 왜 이런 문제를 관료들 손에서 결정되게 내버려 두는가. 과학계는 참 맘도 좋다.

네번째 지식창조인재 육성도 할 말이 좀 있다. 모방.응용인재는 인재도 아닌가., 정부가 창조경제를 외친다고 지식창조인재만 있으면 다 되나, 우리나라 대학들은 왜 전부 연구인재., 지식창조인재만 육성한다고 난리인가. 그것도 한국도 아니고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라니. 그거라도 제대로 하면 또 모르겠다. 인력의 질은 고사하고 양적 공급구조만 더 왜곡시키는 것 아닌가. 지식창조인재가 과연 얼마나 필요한지 논의해야 한다. 5%인가, 10%인가, 아니면 90%인가, 100%인가. 저는 이게 소수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창조경제를 말하

지만 모방.응용인재도 소중하다. 그런 분들 없으면 경제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총장께서 정책의 지속성을 말씀하셨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 임기를 마구 늘릴 수 없는 민주주의 국가다. 중국의 공산당 체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방안이 있는가. 그래도 저는 있다고 본다. 과학계를 리더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된다. 누가 연구소 소장 또는 청와대 수석, 장관으로 들어가든 제대로 된 과학자들이 가야 한다. 역대 과기부 장관 중 칭송이 높은 세 사람이 있다고 누가 얘기 하더라. 최형섭 장관, 김진현 장관, 강창희 장관이 그들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중 과학자는 최형섭 장관 한분 뿐이다. 한 분은 기자였고 다른 한 분은 군인 출신이다. 왜 그런지는 최형섭 장관을 보면 안다. 최 장관은 장관을 오래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 우선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여기에 리더십까지 갖춘 사람이다. 이런 과학자라면 얼마든지 장관, 수석, 이사장을 해도 좋다.. 자기는 자기가 제일 잘 알 것 아닌가. 만약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제발 자리 제안이 오더라도 사양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만 망치는 게 아니라 과학계 자체도 망칠 수 있어서다. 곧 개각도 있고 통합연구회 이사장도 뽑는다는 데 제발 그런 조건을 갖춘 과학자들이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과학계도 그 사람을 따르지 않겠나. 정책은 사람이 만든다..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전문위원